



**국회의원 김선동**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25.(목) 즉시	담당자	서준하 비서관 (010-9085-7121)
문 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 소비자 안전, 손 놓고 방치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 소비자 안전, 나 몰라라 방치, 제 역할 못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 라돈침대, BMW 화재 등 소비자 피해에 '긴급회의' 단 차례도 없어, 매뉴얼 전무
-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에 상정조차 안돼...
- 소비자단체가 '라돈침대'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했지만, 묵살당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이후 마련한 소비자 안전 '긴급대응시스템'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와 현재까지 진행 중인 'BMW 화재' 사건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 김선동 의원이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 등)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련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는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의 대책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기본법」을 지난 2017년 10월 31일에 개정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이에 공정위도 지난 4월 24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소비자 안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했고,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김상조 위원장이 맡게 됐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특히, 소비자 관련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긴급회의 소집 대상은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중대한 위해 중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다.
- 그러나,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라돈침대’ 사태와 불자동차’ 논란을 낳은 'BMW 화재'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총리실과 공정위는 법률에 규정된 ‘긴급회의’조차 소집 하지 않았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6월 18일 소비자단체들이 ‘라돈침대 사태’를 안건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보냈지만, 묵살 당했다는 것이다.
- 현행 시행령 상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야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라돈침대, BMW 화재 등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니 당연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단 1차례만 열렸다.
-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실무위원회 안건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검토를 요구한 사건들은 배제됐다.

- 이뿐만 아니라, 올해 단 한차례 개최(7월 9일)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여러 차례 ‘라돈침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등 대해서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또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라돈침대’, ‘BMW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사태에 대해 단 한 번의 회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선동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크게 위협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소비자 안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다.”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2018년도 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붙임2] 긴급회의 소집 현황

[붙임3] 소비자단체 발송 공문

[붙임4] ‘라돈침대’, ‘BMW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사태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붙임1] 2018년도 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2018년도 제1차 실무위원회 안건 내역〉

회의개최일	안건내용	비고
'18.6.29.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li> <li>•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li> <li>•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li> <li>•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li> <li>•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li> </ul>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내역〉

구분	안건내용	비고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li> <li>•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li> <li>•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li> </ul>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li> <li>•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li> </ul>	

[붙임2] 긴급회의 소집 현황

김선동 의원

작성 책임자	소비자정책과장 남동일
작성자	조사관 김진용
연락처	044-200-4412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긴급회의 소집현황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긴급회의 소집현황

○ 개최된 바 없음('18.5.1.부터 시행)

### [붙임3] 소비자단체 발송 공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회관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2018. 6. 18.

소 협 : 제 2018-189

수 신 : 이낙연 국무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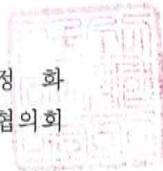
참 조 : 공정거래위원장

제 목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및 대진침대 대책안건 건의

1. 국민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3일 시작된 대진침대의 라돈방출 사건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나 피해소비자는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침대 판매량이 8만 여대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문제 상품의 신속한 회수 및 보상과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제479회 이사회(2018.06.14.) 결의에 따라 이번 라돈침대사건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못지않은 소비자 피해사건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정책의 심의 총괄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3조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피해 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라돈침대 사태를 방지하지 말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 장 강 정 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붙임4] ‘라돈침대’, ‘BMW 화재’, ‘항공기 기체결함’ 사태 관련 회의 개최 현황

김선동 의원

작성 책임자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인민호
작성자	사무관 예윤주
연락처	044-200-4419

- |   |
|---|
| 1. 라돈침대 사건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br>2. BMW 화재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br>3. 항공기 기체결함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 |
|---|

1. 라돈침대 사건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

☐ 해당없음

2. BMW 화재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

☐ 해당없음

3. 항공기 기체결함 관련 공정위 회의개최 현황

☐ 해당없음

